

보도시점 2024. 2. 1.(목) 조간 배포 2024. 1. 31.(수) 09:00

불법추심 피해 서민에 변호사 무료 지원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

- '23년도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3,249건 무료 지원
- '24년도는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예산 확보
- 피해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별도 입증자료 없이도 신청 가능

금년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2월 1일 금융위원회는 '24년도 예산을 사업 시행 이후 최대 규모로 확보*하고, 불법추심으로 고통 받는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사업 예산 규모(억원)] : ('21) 6.04 → ('22) 11.44 → ('23) 8.86 → ('24) 12.55

채무자대리인 사업은 2020년에 도입된 이후 불법대부·불법추심에 대응하여 연 3,000 ~ 4,000여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매년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정도로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대표적인 구제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채무자대리인 지원 실적(건)] : ('21) 4,841 → ('22) 4,510 → ('23) 3,249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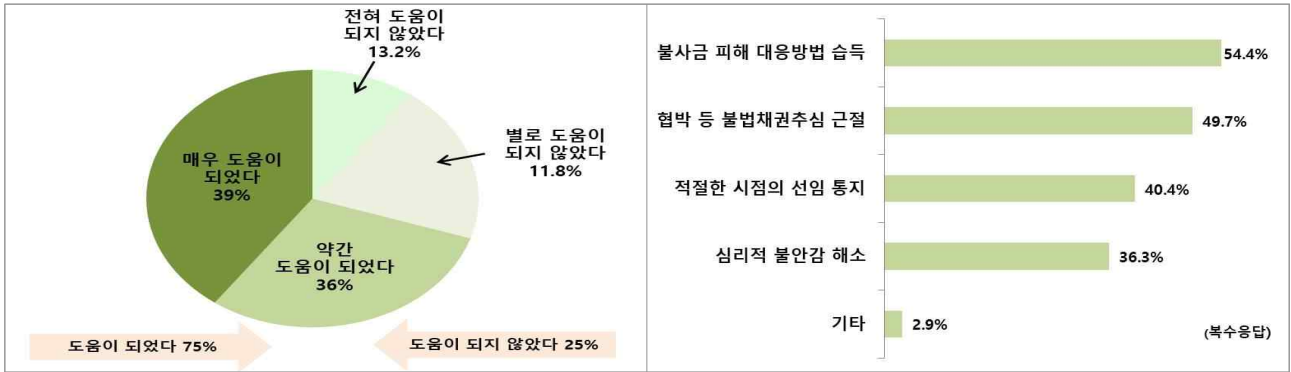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 법률서비스

- ① (채무자대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전화 대응 등 채권자의 추심과정을 일체 대리
- ② (소송대리)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기준중위 소득 125% 이하 대상)

☞ 금감원 홈페이지,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신청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가 ‘불법사금융 실태 확인 및 사업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채무자대리인 사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75%가 “채무자대리인 사업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했으며, 그 사유로 “불법사금융 피해 대응 방법을 습득할 수 있어서”(54.4%)라고 답한 바 있다.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의 도움 여부 및 사유 >



※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정부는 이러한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 과정에서 불법대부·불법추심 피해 사실이나 피해 우려가 확인된 경우 신청인은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피해 입증자료준비 부담이 줄어들고, 적시에 법률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을 전망이다.

둘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신청 편의도 제고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대출 상담시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면, 대출상담자에게 알림톡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채무자대리인 신청 전용 페이지(금융감독원)’ 링크를 전송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축 중인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셋째,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신청하였으나 지원을 못받은 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이 한 차례 이루어졌으나 피해가 계속되는 건*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분석·발굴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 채무자대리 기간은 6개월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 가능(총 2회 이용 가능)

넷째,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금전피해 회복을 위한 손해배상소송 등 소송 대리 사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채무자대리인 이용자 등이 불법추심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금전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이용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사법당국의 불법사금융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소송대리 사업을 적극 소개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피해자가 동 서비스를 이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은 채무자대리인 이용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악랄해지는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더 많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세밀하게 살펴 나가겠으며, 수요자의 의견을 좀더 귀 기울여 듣고 이들의 관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금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서민들을 위협하는 금융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면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을 통해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서민금융공급 확대, 불법사금융 접근 차단, 불법·과잉 추심 방지 및 피해구제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담당자	사무관	구은정 (02-2100-251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박재민 (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책임자	부 장	백영종 (054-810-1061)
		담당자	팀 장	조동규 (054-810-1062)

1. 전화 신청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 불법금융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 화면에 접속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내 신청 화면 >



3. 오프라인 신청

-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
 -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 주요서비스) ‘전국 사무소 이용 안내’에서 확인 가능

1. 대출 수요 발생시

- 이용 가능한 정책서민금융 상품*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서민·중소기업’ 메뉴 → 서민금융133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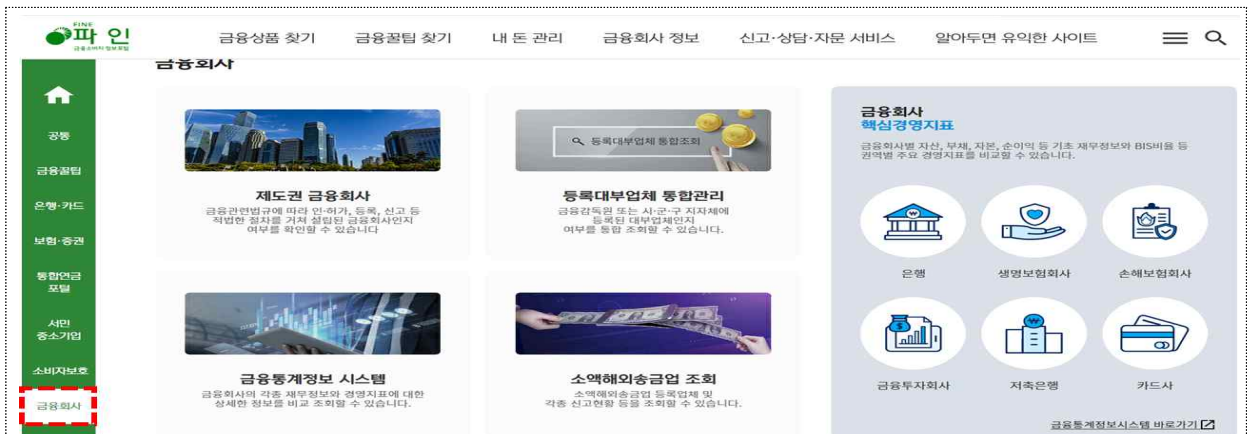
< 파인(Fine.fss.or.kr) 메인 화면 중 ‘서민금융상품’ 등 확인 방법 >



- 대출 상담시에는 대출업체가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 인지 여부를*를 반드시 확인

* (확인방법)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 파인(Fine.fss.or.kr) 메인 화면 중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 >



2. 대출계약시

-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 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21. 7. 7. 이후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에 대해 연 20% 적용 ('21. 7. 7. 이전에는 연 24%)

- 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대출시 공제하는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여 이자율을 계산하며,
- 중개수수료, 공증료 등 명칭에 불문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자가 받은 돈은 모두 이자로 간주

< 선이자 등 지급시 이자율 계산 사례 >

- ☑ 대부업자 갑은 급전이 필요한 을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면서 대출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만 지급, 1개월 후 100만원을 수취

- 원금 : 80만원
- 이자 : 20만원(=1개월 후 지급한 100만원 - 최초 지급받은 80만원)
- 1개월 이자율 : 25%(=20만원/80만원×100)
- 연 이자율 : 300%(=1개월 이자율×12)

→ 수취 이자율은 연 300%로 최고금리(현재 연 20%) 위반

3. 최고 금리 위반 및 불법추심 등 피해 발생시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와의 대부 거래에 있어 불법추심, 최고금리 위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입출금 자료 등 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통화 및 문자기록, 녹취 등 채권 추심과정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보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3번)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